

보도시점 11.7.(금) 조간 < 11.6.(목) 12:00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를 강화, 지역 주도 생태계를 구축
- ‘우수 특구’는 고도화하고, ‘부진 특구’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특구 제도의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목)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알밤생산단지(원재료) - 밤연구소 및 사업단(식품 가공) - 직거래장터(유통) -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관광) 등 지역경제 주체 연계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 + VR·AR 기술)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하여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②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

③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법 체계를 정비하여,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예: 10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비법(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여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 책임자 | 과 장 | 추경훈 (044-204-7590) |
| | | 담당자 | 사무관 | 장좌영 (044-204-7591) |



참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추진과제

◆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1] 부가가치 고도화형 (중규모-전통산업群)

- 특구내 원재료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벨류체인 단계별 기업협업 구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협업 기반의 생태계** 확산

< 특구기반 벨류체인 운영체계(안) >

| 구분 | | 업종 | 특 레 | 역할 |
|-----|-------|-----------------------|----------|----|
| A기업 | 농업 | 농지 위탁경영 허용(법 제36조) | 원재료 제공 | |
| B기업 | 식품 가공 | 별도 식품 표시기준 적용(법 제58조) | 와인 생산 | |
| C기업 | 유통 | 지방도매시장 개설(법 제40조) | 안정적 유통망 | |
| D기업 | 관광 | 관광단지 조성계획 의제(법 제65조) | 브랜드 홍보 등 | |



- 공주 알밤특구 : 알밤생산단지(원재료) - 밤연구소 및 사업단(식품 가공) - 직거래 장터(유통) -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관광) 등 지역경제 주체 연계

- **우리부** 상권르네상스 등 **상권 육성사업, 타부처* 공모사업** 등과 연계 확대 → **전통 특화사업**을 지역의 '**자생적 성장모델**'로 육성

* (예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림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문화도시 조성(문체부) 등

2] 융합 혁신형 (중규모-신산업群)

※ 융합형 산업 및 특례(예시)

- ▶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 + VR·AR 기술)** : 전통 건축물·의례·복식 등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기존의 관람형 → 체험참여형 관광으로 방문자 만족도 상승 → **(필요특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의제(문화재보호법), 기기 전파인증 간소화(전파법)

- **지자체 요청시** ①기존특례 외 **해당특구에만 적용가능한 개별인정 특례 허용**, ②**기존 특례의 한도확대** 등 추진

- ①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메뉴판 이외 특례를 특정 특구에 한해 허용
- ②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역특구법」상 기존 특례 한도를 해당 지자체에서만 조례로 확대



- 법에 특례를 추가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인정특례**'를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임(강원 OO특구)

- 현장 미활용 특례는 실효성 검증 → 산업여건 변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특례는 대안* 도출

* (예시) 일부 분야 외국인 비자 발급 간소화 특례 → 실제 외국인 고용 가능분야로 확대

현장의 목소리 ▪ 현 특례가 오래된 규정 위주로 되어 있음. 개별법상 절차를 거쳐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서울 OO특구)

③ 도전 도약형 (소규모 ※소도시·군단위·인구감소)

- (민간참여 방식)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 사업 아이디어 제안 → 지자체와 컨소시엄 구성 → 특구내 규제특례를 활용 특화사업 추진

* 중기부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한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풀(pool)을 활용

- (전문코칭 방식) 지방청(비즈니스지원단), 민간 전문가(기업, 대학 등)의 전문 컨설팅 통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적용 등 쏠주기 밀착 지원*

* 지역산업 구조 분석, 특화사업 모델 개발, 적용가능 규제특례 등 종합 지원

◆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① 성과중심 특구 운영체계 도입

- 우리부는 KPI기반 성과측정, 등급제 강화(5단계) 통해 '우수특구'는 고도화, '부진특구'는 단계적 구조조정('명예졸업제' 도입 등) → 유망 특구 중심으로 세대교체
- 유망 특화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판로·마케팅, 생산 효율화, 제품개발 등) 연계하고, IR 기회 확대 → 특화특구가 역외 자본 및 수도권 기업 유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운영

현장의 목소리 ▪ 현 특화특구 제도는 재정, 세제 지원 등이 없어, 수도권 기업의 지역 내 유치가 어려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방안 요청(전남 OO특구)

② 지역별 현장 밀착지원 강화

- 지방중기청 중심의 현장 지원·소통 체계 강화 → 권역 내 특구 기획·운영·평가 등 쏠 단계 밀착 지원으로 성과 창출 견인

현장의 목소리 ▪ 성장 동력이 떨어진 특구는 운영 성과 개선에 한계가 있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기부 차원의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운영할 필요(강원 OO특구)

- ① (기획)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사업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육성 방안 컨설팅 → 시군구 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
- ② (운영) 관내 특구에 대한 상시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소통·관리 체계 유지 → 특구계획의 조기성과 창출 견인
- ③ (평가) 지방중기청이 1차 평가(정량) 및 현장실사 → 중기부(본부)가 최종 평가(정성) 실시

◆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① 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 특화특구 제도의 장기 발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법체계 정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예시) 지정 및 해제 기준, 신성과평가 체계, 메뉴판식 특례 등 법령 개정

②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 유사 특구간,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과 소통을 강화 → 성과 확산 및 광역적 시너지 효과 창출
- (유사 특구間) 운영 노하우 전수하거나, 특구간 공동프로젝트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유도
- (중앙-지방間) 고위급 참여하는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 신설
- * (예시) 중기부 국장급, 지방중기청장, 기초지자체 부단체장급 등 참석

기대 효과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지원**, '신상필별식' **성과중심 제도 개편** → 세대교체를 통한 **특구의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
- 우수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지역 기업을 키우고 **정부가 연계 지원** → 특화사업의 **'성공 방정식' 마련**
- 지역 스스로 **'맞춤형 떡거리'**를 꾸준히 **발굴·육성** → 지역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가 늘어 인구 유입이 확대** → **'진짜 지방시대' 구현**